

KWDI

해외통신

2019년 1월 2차 (2019.1.17~1.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 스포츠계의 성폭력 근절 방안과 이행 상황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4년,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쾰른 스포츠 전문대학(Sporthochschule Köln)에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안전한 스포츠(SAFE SPORT)'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포츠 내 성폭력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총 1,799명의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을 인터뷰했다.
- 연구 결과, 선수들은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선수의 86%가 스포츠 영역에서 학대나 멸시, 따돌림을 경험했고, 응답자 중 1/3은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선수 중 약 1/3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9명 중 1명은 스포츠 영역 내에서 심각한 또는 장기간 성폭력을 경험했다. 선수들이 경험한 성폭력은 정서적 폭력과 신체 폭력을 동반했으며, 처음 성폭력을 경험한 나이는 평균 18세 미만이었다.
- 연구팀에서 규정한 성폭력은 ▲신체 접촉 없는 성폭력(성차별적 농담, 성적인 발언과 시선,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성적 취향에 관련된 사진 메시지 전송) ▲성적 경계선 침해(부적절한 접근이나 요구, 일상과 훈련에서 부적절한 접촉, 부적절한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키스, 성적 접촉, 강제 성행위와 성관계 등) 등 세 가지 유형의 모든 폭력을 포함한다.
- 전문가들은 스포츠 영역 어린이와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이 스포츠연맹과 전문협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후 독일 스포츠연맹(Der Deutsche Sportbund)과 독일 올림픽스포츠연맹(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은 성폭력 예방과 문제 개입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2017), Sportentwicklungsbericht 2015/2016 : Analyse zur Situation der Sportvereine in Deutschland:23
- <https://www.dtb.de/kinderschutz/praevention-sexualisierter-gewalt/>
- <https://www.netzathleten.de/news/item/6379-forschungsprojekt-safe-sport-erste-daten-zu-sexualisierter-gewalt>
- https://www.deutschlandfunk.de/studie-der-sporthochschule-koeln-demuetigungen-im-sport.890.de.html?dram:article_id=399236

스포츠과학을 위한 연방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 2017)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협회나 연맹은 ▲성폭력 관련 문제 발생 시 외부 상담 기관과 연결 ▲성폭력 방지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독관 설치 ▲의심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처리방안 마련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 ▲성폭력 예방 규정 마련 등이 있다. 직원과 관련해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트레이너 및 코치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 책임 서명 ▲아동 청소년 영역 전임/자원봉사 직원을 위한 지도 증명서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독일의 주(州)정부 스포츠연맹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특별 상담원(spezifische Ansprech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 상담원’은 모든 주정부 스포츠연맹 조직에서 성폭력 의심 사례를 처리하고 상담, 조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별 상담원’은 2010년 이래 200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에 개입했으며, 관련 사례 중 20% 사건에 대해 협회 제명이나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이끌어 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지만, 이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안전한 스포츠(SAFE SPORT)’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9만 개에 이르는 스포츠연맹 중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9%에 불과하고, ‘특별 상담원’을 두고 있는 곳도 열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스포츠과학을 위한 연방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 2017)에서 발행한 보고서 역시 11.2%의 연맹만이 정기적으로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나 사건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을 가진 연맹도 12.1%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스웨덴 SWEDEN



미투(#Metoo)가 쏘아올린 작은공! 그리고 스웨덴의 큰 변화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유명 칼럼니스트와 인기 방송인의 성범죄 사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피해 사실의 공유를 넘어 각계각층 여성들의 사회적 연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투 가해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회 제도까지도 계기가 되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스웨덴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각 기관 차원에서 성평등 조치 및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https://mfj.se/>
- <https://www.thelocal.se/20171124/what-does-the-metoo-campaign-tell-us-about-swedish-feminism>
- <https://www.thelocal.se/20181125/swedish-school-puts-metoo-on-the-curriculum>
- <https://www.thelocal.se/20181210/one-year-on-what-did-metoo-achieve-in-sweden>

먼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장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닌니 칼손(Ninni Carlsson)은 그간 스웨덴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인 주제로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관련해 스웨덴 비영리단체 맨(Män)¹⁾이 2018년 10월 ‘미투 이후 남성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성범죄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의 책임이 크다’에 85% 이상, ‘미투 운동이 성평등 향상에 기여한다’에 79% 이상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성평등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39%, 미투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경우는 5%에 그쳤다. 이를 Män 회장인 알란 알리(Alan Ali)는 성범죄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큰 사회적 변화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참여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Sifo (2018.10), Ett år #Eftermetoo (en sifo-undersökning om Mäns attityder till #metoo-upproren)
- Diskrimineringslag, 2008:567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차별방지법을 개정했다. 2008년 도입된 차별방지법(Diskrimineringslag, 2008:567)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신고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었다. 이후 2017년 개정법에는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직장 내 차별이나 성희롱 발생 시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하는 등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건 처리의 전 과정(후속조치 포함)을 문서화하고,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법도 강화했다. 한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인력 증원 및 전문가 영입 예산을 증액했다. 이 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성폭력 관련 수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2018년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 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성적동의법(Sexual Consent Law)을 도입하였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양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차원에서의 성평등 조치 및 윤리 규정 강화 사항이다. 그 동안 스웨덴 언론사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해자 신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였지만, 미투 운동 이후 일부 언론사는 필요 시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미투와 관련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추가해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관련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토론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기업은 성희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미투 관련 홍보책자나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휴게실에 배치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최대 규모의 문화 역사박물관인 노르딕 박물관(Nordic Museum)은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여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1) Män은 남성을 성평등 문제에 참여시키고, 남성 폭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2018년 10월 사회조사기관인 Kantar Sifo에 미투 이후 남성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베를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공휴일 지정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독일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여성 투쟁의 날(Frauenkampftag)'이라 부른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의와 의미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여전히 투쟁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베를린 시의회 내무성위원회가 3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에 동의한 데 이어 1월 24일, 베를린 주의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베를린은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독일 최초의 주(州)가 되었다. 독일 주정부는 지방 행정단위가 아니라 헌법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베를린 주의회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결정하기까지는 수개월 동안 긴 논의가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베를린 주가 다른 주보다 공휴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시작했다. 베를린 주 공휴일은 지금까지 총 9일로, 독일 연방 내에서 공휴일이 가장 적다. 이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이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3월 혁명의 날을 기념하는 3월 18일, 종전날인 5월 8일 등 여러 당에서 제안한 다양한 날짜를 두고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사회민주당(SPD)의 제안에 따라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이 3월 8일을 공휴일로 추진하는 데 찬성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기독교민주당(CDU)의 스테판 에버스(Stefan Evers)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를린 시민들은 기독교 관련 휴일을 선호한다."며 매년 다른 날을 공휴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의 대안(AfD)은 새로운 휴일 지정을 투표방식으로 정할 것을 권하며 "남녀평등이 여전히 큰 과제이지만 휴일 지정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과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한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녹색당은 이번 결정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좌파당의 카티나 슈베르트(Katina Schubert) 의원은 "3월 8일 휴일 지정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대해 살펴보고, 모든 여성과 함께하는 국제적 연대의 신호"라고 말했으며, 사회민주당 정치인 아이리스 슈프랑거(Iris Spranger)는 "3월 8일 공휴일 지정은 미래에 위한 강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의원들도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고 평등 사회에 도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3월 8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날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https://www.taz.de/Archiv-Suche/!5565267&s=marz/>
(검색일: 2019년 1월 24일)
-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1/berlin-innenausschuss-beschliesst-neuen-berliner-feiertag-am-8-maerz.html>
(검색일: 2019년 1월 22일)
-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8/12/feiertag-8-maerz-gesetz-abgeordnetenhaus-berlin.html>
(검색일: 2019년 1월 22일)
- <https://www.berlin.de/special/familien/5597854-2864562-frauentag-8-maerz-neuer-feiertag.html>
(검색일: 2019년 1월 22일)

한편 올해 베를린에서 여성 파업을 준비 중인 '베를린 여성 파업 준비위원회(Frauenstreik-Komitee Berlin)'의 알렉스 위시네스키(Alex Wischnewski)는 독일 언론 '타츠(Taz)'기고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대다수 여성이 임금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주당 평균 16시간의 유급 노동과 30시간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문제, 직업 기회 부족, 임금 삭감, 노후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남성은 주당 평균 25시간의 유급 노동과 19시간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정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추진 계획 발표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11월 초, 여성교수(women-only professorial positions) 채용목표제 계획을 발표했다²⁾. 향후 3년간 아일랜드 내 대학에서 45명의 여성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아일랜드 대학 내 교수 인력 비율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선 2019년 9월까지 15개 교수직 채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 45개 전부 채용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약 4백 7십만 유로(한화 약 60억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계획은 정부의 행동계획 보고서 "Gender Action Plan: Accelerating Gender Equality in Ir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018-2020"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본 보고서는 "2026년까지 아일랜드는 고등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매리 미첼 오코노(Mary Mitchell O'Connor) 고등교육 장관(Minister for Higher Education)은 이번 행동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아일랜드 고등교육기관 내 교수의 40%가 여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계획 보고서는 아일랜드 고등교육청(Higher Education Authority, HEA)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 대학 강사 중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반면 교수로 임용된 여성은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일랜드 대학에서 여성이 총장직을 역임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으며, 2013-2017년 기간 동안 교수직 내 여성 비율은 단 1-2% 남짓 개선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시에 보고서는 현재 수준이라면 아일랜드 7개 대학 내 여성 교수 비율이 40%에 이르는 데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단기, 중기, 및 장기 타깃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청(HEA) 내에는 성평등추진센터(Centre for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유,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이니셔티브나 협력사업 추진 등과 같이 고등교육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Gender Equality Taskforce (2018), "Gender action plan: Accelerating gender equality in Ir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www.education.ie/en/Publications/Policy-Reports/gender-action-plan-2018-2020.pdf> (접속일자: 2018년 1월 21일)
- The Irish Times (2018), "Women-only professorial posts will work," 2018년 11월 15일자, <https://www.irishtimes.com/opinion/women-only-professorial-posts-will-work-1.3697691> (접속일자: 2018년 1월 21일)
- University Observer (2018), "Irish Government to fund women-only university positions," 2018년 11월 21일자, <https://universityobserver.ie/irish-government-to-fund-women-only-university-positions/> (접속일자: 2018년 1월 21일)

발표 이후, 리오 바라드카(Leo Varadkar) 총리는 이번 행동계획이 역사적인 조치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적극적 개입으로 보다 어린 여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대학 내 여성 롤모델이 더 많아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계 내 고급인력 여성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즉 도미노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고등교육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이자 개입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아일랜드대학협회(Irish Universities Association, IUA)는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회 소속 대학 모두 이번 행동계획 보고서의 제언에 공감하며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이행에 필요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아일랜드 법에서는 젠더를 기반으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만 교수직 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를 위반한다는 해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동계획이 이제 막 발표된 만큼, 앞으로 아일랜드에서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2) 일부 기사에서는 교수 및 학계 고급인력(professorial positions 또는 senior academic positions)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행동계획 보고서 내 교수직(full professors)이라고 표기한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교수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